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우리 민족끼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가

지난 주 수요일, 9월 5일,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에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중경기자의 칼럼이 실렸다. 평소 관심이 많은 한반도 문제, 통일문제에서 꼼꼼히 읽어보았다. '우리가 한반도 주인이라는 인식은 중요하지만 경대국 이익을 외면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지금 경대국 이익의 공통분모가 북핵 제거다. 독일도 이를 전제로 통일을 이루었다. 정부도 꿈이 아니라 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내일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알리고 있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글을 쓰고자 한다. 우선 '우리 민족끼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과 내용이 각자 저지와 이에 따라서 경대국에게는 제국주의도 되고, 약소국에게는 미법 같은 희망도 되는 변용을 겪은 것은 맞다. 나는 민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일제 식민지배와 동족상잔의 전쟁, 분단과 독재, 가난과 소의 속을 헤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변천되고 어떻게 적용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

리 민족이다'는 선언과 합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974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1974년 8월 15일 박 대통령은 '1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2단계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3단계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은 노태우 정권의 1992년 남북기본 협의서, 김대중 정권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권의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도 재확인되고 재선언 되었다.

지금도 '외세 배격',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포기로 잘못 알

고 반미, 종북 좌파로 보는 편협된 구시대적 이념의 굴레에 강고하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도처(到處)에 의외로 많다. 동족상잔(同族相殘) 등 민족의 비극은 아직도 상흔(傷痕)이 깊고 아프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평화 공조를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동·서독의 20여년에 걸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 사례와 교훈을 들지 않더라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같은 이념을 앞세우면 교류 협력이 안된다.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바이너리적인 평화, 동계올림픽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 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분야로 교류 협력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원조는 역설적이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선언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은 3개월 후, 대통령 간선제를 통한 영구 집권을 꿈꾼 10월 유신독재 선포로 사장되었다. 이 평화통일 3대 원칙은 1992년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 협의서, 2000년 김대중 정권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권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부침(浮沈)의 40여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났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분단의 상장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에 담아서 선언했다. '한반도 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글을 쓴 사람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끊이고 현실은 강대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모든 꿈은 현실 위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간절히 꿈을 꾸면 꿈은 현실이 된다. 또한 민족의 해방도, 국토의 분단도 경대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경대국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우방이요, 우리의 협조자이다. 경대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운명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우리 민족이 깨어나서 단결하고 주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쳐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 흰만으로는 안된다. 고 이에 단념하고 주저앉아서는 악육강식의 비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느 손에 또 다시 민족의 비극이 시작될지 모른다.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경대국을 조정하고 종재하고 협조하여 우리 민족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이 안전표식 인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가 허다하다. 운전 중 갓길 주·정차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간 100m 이상의 지점과 야간 500m 이상의 지점에 적색 삼광신호나 불꽃신호 등 안전표식인 삼각대를 꼭 설치해야 한다. 특별한 조치 없이 갓길 주·정

차 시에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믿음 후방 주

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방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다는 표식을 꼭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삼각대와 적색삼광신호 같은 안전 장구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장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광필 / 화순소방서 화순안전센터

社說

몰래카메라 단속 지속돼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979건)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
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
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
화했다.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
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8% 증가했고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당
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여 여성
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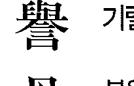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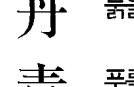
千字文



馳譽丹青



▶뜻: 그 이름은 생전 뿐 아니라 죽은 후
(後)에도 전(傳)하기 위(爲)하여 초상(肖
像)을 그린 비각(碑誌)에 그림.



馳譽丹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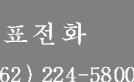
馳譽丹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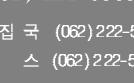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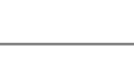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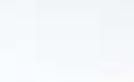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馳譽丹青

